

# 野 외면에 속 타는 추경안

### 3차안, 보름 넘도록 심사 못해...정부 선제 대응 기조 차질 문 대통령 "비상한 방법 강구"...통합당 "국회 복귀 안 해"

21대 국회 원 구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온 지 보름이 넘도록 심사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처를 위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선제 대응 기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국회)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6월 통과가 무산되는 안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19일 추가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연기로 여권이 성의를 보였고 안보 위기 국면에서 야당도 버티기만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도래한 만큼 6월 마지막 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 원 구성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여당도 야당의 원 구성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 코로나19와 북한의 연락사무소파괴로 인한 경제-안보 위기 상황은 더할 수 없이 엄중한 상황이며, 여야 간 협력의 정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상임위가 가동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제일 중요한 3차 추경안 심사는 예결위를 비롯해 12개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

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달 추경심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불가피하게 미뤄지게 됐다"면서 "이번 주중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더 늦기 전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3차 추경안 심사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경북 울진의 한 사찰에서 국회 복귀를 묻는 질문에 "상황 바뀐 것이 전혀 없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방문판매·물류센터·대형학원 코로나 고위험시설 지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대학등록금 현금 지원 불가 방침

### "대학 자구책 마련이 먼저"...간접지원책 고심

코로나19로 수업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학생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기보다 먼저 대학에서 자구책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당과 교육위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분명히 하며 현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생계가) 어렵지 않은데도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금 지원 대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간접지원 방안을 두고 대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도 등록금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애초 등록금 보전 방안 논의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3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재정 지원에 난색을 보여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정부는 흥남기 경제부총리가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그러나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정의당은 추경 증액 9000억원에 대학 부담 9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으로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열린민주당 역시 대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조오섭 "광주시 감염병관리기구 출범 환영"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21일 "광주시의 감염병관리기구 조기 출범과 특수고용직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에 택시 운수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조선대 산학협력단 예방의학교실 류소연 교수를 단장으로 예방의학, 보건학, 면역학, 간호학 등 전문 연구인력 8명으로 구성된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역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내 감염병 감시·분석 ▲국내외의 감염병 동향 모니터링 및 감염병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염병 관리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역학조사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조 의원은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코로나19 관련 정책과 대안이 현실화된 만큼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여권 "윤석열,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

### 한명숙 사건 대검 검찰 무마 문제 공개 제기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위중교사 의혹 검찰 문제를 놓고 여권이 파상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당 회의 직후 윤 총장에 대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운 지 얼마나 됐느냐"며 "갑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YTN 라디오에서도 "장모

사건 등으로 조금 진중 하다가 했더니 이렇게 또 장관과 각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만간 결판을 지어야 한다"고 윤 총장을 직격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공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을 대검 검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하기 위해 윤 총장이 사본 진정서를 만드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언

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배당은 검찰부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 무마 의도가 없다면 독립적인 검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이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 사건을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기구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하는 것은 지휘권을 남용한 대검의 검찰무마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아니고, 대검이 법률을 위반하고 법무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것이 핵심"이라며 "검찰무마에 대한 조사와 적절

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한 위중교사 의혹을 최초 폭로했던 A씨를 광주교도소에서 접견, "중앙지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검찰 조사를 요구하는 옥중 편지를 건네받은 뒤 이를 같은당 김진에 의원을 통해 법사위 회의에서 공개했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장관이 검찰 방해 사실을 확인하고 제 자리로 돌려라는 지시를 했다"며 "윤 총장은 시간을 끌며 역지를 부리겠지만, 이미 앞질러진 물"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이용빈, 재난지원금 규정 신설·국고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21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출현은 전세계적 재난으로 경제사회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번 코로나19 민생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대응했지만,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대비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규정 신설 등 국고 즉각 지원이 가능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전망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지원하기 위해 편성할 수 있는 긴급자금"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업무에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고 지원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계보호와 경제사회적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